

한-쿠바 재수교 합의와 통일외교

Online Series

2024. 02. 15. | CO 24-16

서보혁(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한국과 쿠바가 오랫동안 끊겨있던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2월 14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욱 커진 외교적 격차

1949년 7월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됐지만, 1959년 1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 65년 만의 재수교 합의이다. 정부는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테말라에서 열린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 및 각료회의에서 쿠바 측 대표단을 만나 양국 간 교류를 협의하였다. 사실 냉전 해체 이래 한국 정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로써 『외교백서 2022』 기준, 한국은 상주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이 168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시리아를 제외하면 유엔 회원국들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높아진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북한은 그 반대이다. 위 『외교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53개국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23~24년 들어 스페인, 홍콩, 그리고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일부 수교국들에서 공관이 폐쇄돼 북한의 재외공관은 44개로 줄어들었다. 북한의 외교적 타격은 크다. 김정은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고” 나가겠다고 공언했으나, 한-쿠바 재수교로 그 말에 힘이 빠져버렸다. 북한에게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중국,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가장 든든하고 오래된 우방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 합의가 전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냉전 해체 이후 한국은 쿠바와 재수교를 위해 노력해왔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쿠바도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쿠바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대미 적대관계 하에서 북한과 외교적 공조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과의 수교를 미뤄왔다. 특히, 쿠바를 50년 이상 집권한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형제는 반제반미노선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연대를 지속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두 나라 친선관계를 영원히 계승해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쿠바는 냉전 해체 이후 한국과 인적, 경제적 교류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수교를 향한 분위기를 서서히 조성해왔다. 소련과의 우호무역 붕괴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쿠바에게 성장일로를 걷는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대우, LG, 기아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쿠바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방문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코트라(KOTRA) 등 정부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경제교류사업과 북한의 후원이 끊긴 한인 후예들에 대한 지원도 쿠바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결정을 내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정부는 물론 교황청까지 나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 중재에 나서 결정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통일외교의 과제

현재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2천만 달러를 약간 넘는 규모이지만, 외교관계 정상화로 경제협력의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높아질 것이다.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반전반핵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수교 합의로 한국의 북핵외교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냉전 해체 이후 한-쿠바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재수교 합의가 한국의 중남미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는 의미가 있다. 오히려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는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에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그에 관한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대사관 개설 및 대사 교환까지 재수교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일이 우선 과제이다. 이번 발표는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합의한 ‘외교 공한 교환’이므로 실제 대사급의 외교관계 운영에는 사람, 시설, 장비 등 일련의 준비를 전개해가야 한다.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대비하며 대사관 개설 및 대사 교환까지 쿠바와의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중추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이는 일이다. 경제의 세계화와 글로벌 복합위기로 세계적 차원의 경제 격차가 커지면서 남반구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교 지평을 확장하고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데 있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를 계기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인권 신장 등을 십분 활용해 교류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때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받고 이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넷째,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하는 일이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노동자로 체류하면서 쿠바를 어렵지 않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이고 대부분 이주민들이다. 이들의 국적과 소득의 송금, 가족 상봉 등이 쿠바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 입국이 줄어드는 대신, 탈북민들과 북한 내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북한사회 변화와 대북정책에 주는 영향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반제자주외교를 천명한 가운데 한국과 쿠바의 수교 합의가 갖는 의미가 크지만, 통일외교에 시사하는 바도 작지 않다. 쿠바의 정치·경제개혁, 해외이주민 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도 우리의 통일정책을 더 풍부하게 해줄 주제들이다. 한국과 쿠바의 정책연구집단 간 교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